

	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 도 참 고 자 료</h1> <h2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배포 시부터 보도가능</h2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미래창조 금융</li> <li>• 따뜻한 금융</li> <li>• 튼튼한 금융</li> </ul>
---	---	---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, 자산운용과			
책 임 자	이형주 과장 (2156-9870) 안창국 과장 (2156-9900)	담 당 자	(BW, 거래소) 김성준 사무관 (2156-9876) (사모펀드) 송병관 사무관 (2156-9898)	
배 포 일	2015. 7. 6. (월)	배 포 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	총 5 매

## 제 목 : 「자본시장법」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
-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통한 자산운용산업 발전
- 분리형BW 공모발행 허용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

### 1. 그간의 추진 경과

- '15.7.6(월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
- 동 법안은 정부가 발의('14.9.5.)한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법안과 박대동 의원이 발의('14.11.20.)한 분리형BW공모발행 허용 법안 등을 정무위에서 병합·수정('15.4.30.)한 것으로 법사위 심의('15.6.16.)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

### 2. 법안의 주요 내용

#### (1)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

##### ① 사모펀드 규율체계의 재정립

- 사모펀드를 “전문투자형(헤지펀드)”과 “경영참여형(PEF)”으로 단순화하고, 공모펀드와 구별하여 규율

\* (현행) 일반사모펀드, 헤지펀드, PEF, 기업재무안정 PEF의 4종류로 구분

## ② 사모펀드 진입 · 설립 · 운용 · 판매 규제 대폭 완화

### ① (진입)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집합투자업자를 “전문사모 집합투자업자”로 명명하고 “등록”만으로 진입을 허용

- \* (현행) 일반사모 · 헤지펀드 운용사 : 인가 / PEF 업무집행사원 : 사전 등록
- \* 최소 자본금 등 구체적인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예정

### ② (설립)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설립후 2주 내에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 하는 것으로 규제 완화

- \* (현행) 일반사모펀드 : 사전등록 // 헤지펀드 : 사후 보고 // PEF : 등록

### ③ (운용) 모든 사모펀드의 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

- \*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: (현행) 투자대상별 펀드 설정 → (개선) 한 펀드내 다양한 투자 편입 허용 등
- \*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: (현행) 다중 SPC 설립 금지, 자산 5%내 증권투자 허용 등 → (개선) 복층SPC설립 허용, 자산 30% 내 증권투자 허용 등

### ④ (판매) 사모펀드 판매시 적합성 · 적정성 원칙<sup>1)</sup> 을 면제하고 일부 투자 권유광고<sup>2)</sup> 및 운용상품 직접 판매<sup>3)</sup> 를 허용

- 1) (현행) 공모펀드와 동일하게 적합성 · 적정성 원칙 부과
- 2) (현행) 광고 전면 금지 // 3) (현행) 투자매매 · 중개업 인가 필요

## ③ 금융전업그룹\* 등에 대한 PEF 운용 규제 완화

※ 공정자산\*을 기준으로 PEF를 제외한 금융 · 보험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비율(75%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)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

- \* 공정거래법 시행령 17조 : 기업집단 계열사 자산의 합계액(다만, 금융 · 보험 계열사는 Max[자본금, 자본총액]을 적용)

- 금융 ·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금융지주회사그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배제되는 바, 현재도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적용받지 않음

### ○ 금융전업그룹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PEF 운영과 관련 불합리한 일부 규제\*를 완화

- \* ① PEF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→ 허용
- ②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 → PEF LP에 대해서는 면제
- ③ PEF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5년내 처분의무 등 → 원칙 7년 + 3년 추가 가능

#### ④ 사모펀드 투자자의 합리적 제한

-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완화에 상응하여 투자자는 손실 감수능력이 있는 “적격투자자\*”에 한하여 허용

\* ① 전문투자자 ② 일반투자자로서 일정 금액(현행 : 헤지펀드 5억원, PEF 10억원  
→ 개선 :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)이상을 한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자

#### ⑤ 사모펀드 자금차입 등에 대한 감독 강화

- 자금차입 및 자산운용 규제의 기준을 “순자산(자본)”으로 통일하여 규제의 일관성 및 실효성 제고

\* (현재) “재산총액”과 “순자산”을 혼용하여, 차입한도 규제의 실효성 저하

#### ⑥ 사모펀드를 활용한 계열사 지원 방지장치 강화

- 경영참여형 사모펀드(PEF)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금지

#### ※ 정부안 제출 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경된 사항

##### ① 사모투자재간접펀드 제도 미도입

- (정부안) 사모펀드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공모재간접펀드 도입을 추진
- (수정안)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모투자재간접펀드 제도 미도입

##### ② 금융전업그룹PEF의 투자기업 처분기한 규제 완화 범위 축소

- (정부안) 금융전업그룹PEF의 투자기업 처분기한을 5년에서 15년으로 완화하는 방안 추진
- (수정안)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투자기업 처분기한을 7년(금융위 승인을 받아 3년 연장 가능)으로 설정

## (2) 분리형 BW(신주인수권부사채) 공모발행 허용

-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상장기업의 분리형 BW 발행이 전면 금지\* 되었으나, 대주주 등에 의한 편법적 활용이 불가능한 공모방식의 발행은 재허용

\* 채권과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대주주가 저가로 매집하여 편법적인 경영권 확보 등에 활용함에 따라 '13.9월부터 분리형 BW 발행을 전면금지

## (3) 기타 사항

- ① 투자회사형 펀드의 최소 자본금 요건(10억원)을 폐지
- ② 거래소 회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부담의 우선순위 변경

< 거래소 결제이행재원 사용순서 (법 개정 후에는 시행령에 규정) >

	1 순위	2 순위	3 순위	4 순위
현행	결제불이행 회원의 공동기금	정상회원 공동기금	거래소 자체재원 (결제적립금)	거래소 기타자산
개정 후	결제불이행 회원의 공동기금	거래소 자체재원 (결제적립금)	정상회원 공동기금	거래소 기타자산

## 3. 기대 효과

### (1) 사모펀드 활성화

- ① 시중 부동산자금의 돈맥경화를 해소할 투자기회 제공
- 수익성 높은 투자대안을 제시하여 부동산자금, 연기금에 효율적 자산운용 수단을 제공
  - 사모펀드는 중소·벤처기업 투자, 구조조정, M&A 등을 주로 담당하여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모험자본 역할에 적합

## ② 사모펀드 규제 정비와 감독 강화를 통한 부작용 최소화

- 규율체계 재정립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사전·사후 감독 강화를 통해 계열사 지원, 독점력 남용 등 부작용도 최소화

## ③ 국내 사모펀드에 대한 역차별 해소를 통해 외국자본 대항마 육성

- 규제가 전혀 없는 외국 사모펀드에 비해 엄격한 규제로 국내 자본 결집이 어려워 수익성 높은 기회를 외국 자본이 독점하고,
  - 국내 연기금 등의 운용규제가 자유로운 외국계 펀드를 선호하여 국내 토종 운용사가 육성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

## (2) 분리형 BW 공모발행 허용

### □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

- 분리형 BW는 신주인수권의 분리매각이 가능하여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이점

\* '09~'13년 중 상장기업의 공모형 BW 발행은 3.6조원에 달하나, 분리형 BW 발행 금지 이후 이를 대체할 자금조달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

## 4. 향후 계획

### □ (시행시기) 사모펀드의 경우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('15.10월 예상)

\* 분리형BW 및 투자회사형 펀드 최소자본금 규제 관련 : 공포시  
거래소 관련 : 공포 후 6개월

### □ (후속조치)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, 사모펀드운용업자 등록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

- 시행령·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(7월 중 입법예고)

\* 동 법 시행일에 맞추어, 현행 헤지펀드 모범규준도 폐지

- 법 시행일 이전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